국민권익위원회

국민권익위
빅데이터로 분석한

국민의 소리

2025년 1월 동향 (제805호)

▶ 전월 대비 8.9% 감소(977,553건)

▶ 국세청, 기재부, 인천, 강원 평창군, 울산교육청,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 전월 대비 증가

▶ 2월 민원예보로 '중고거래' 선정, 국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고거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, 중고거래 금지 품목 단속 강화 등 제시

국민권익위 빅데이터로 분석한

국민의 소리

No. 805 | 월간동향 | 2025년 1월

01 민원 동향(1월) 1

민원 추이 / 신청인 현황 / 지역별 현황
분야별 현황 / 주요 민원키워드

02 기관별 동향(1월) 5

중앙행정기관 / 지방자치단체 / 교육청 / 공공기관등

03 민원예보(2월) : 중고거래 10

빅데이터로 보는 「국민의 소리」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부처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'국민신문고' 등에 접수된 민원, 제안, 상담을 분석하여 발행하는 자료입니다.

01 민원 동향(1월)

민원 추이

·2025년 1월 민원 발생량은 **총 977,553건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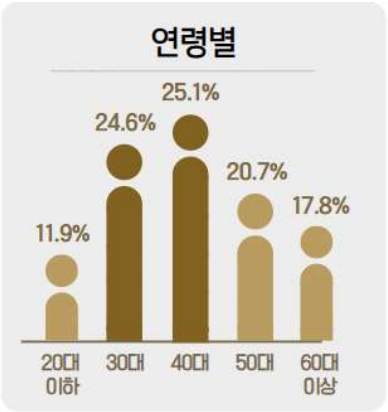
·전월(1,073,098건) 대비 8.9% 감소, 전년 동월(1,090,901건) 대비 10.4%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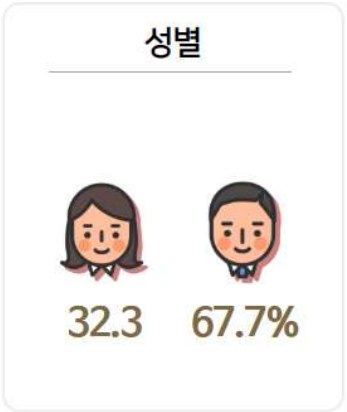
※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(시도포털, 새올)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('25.2.3. 10시)

신청인 현황

·연령별로는 **40대**(25.1%) 및 **30대**(24.6%), 성별로는 **남성**(67.7%)이 다수를 차지

·연령 및 성별은 **30대 남성**(16.8%), **40대 남성**(15.5%), **50대 남성**(13.8%) 등의 순





※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128,071건 대상

01 민원 동향(1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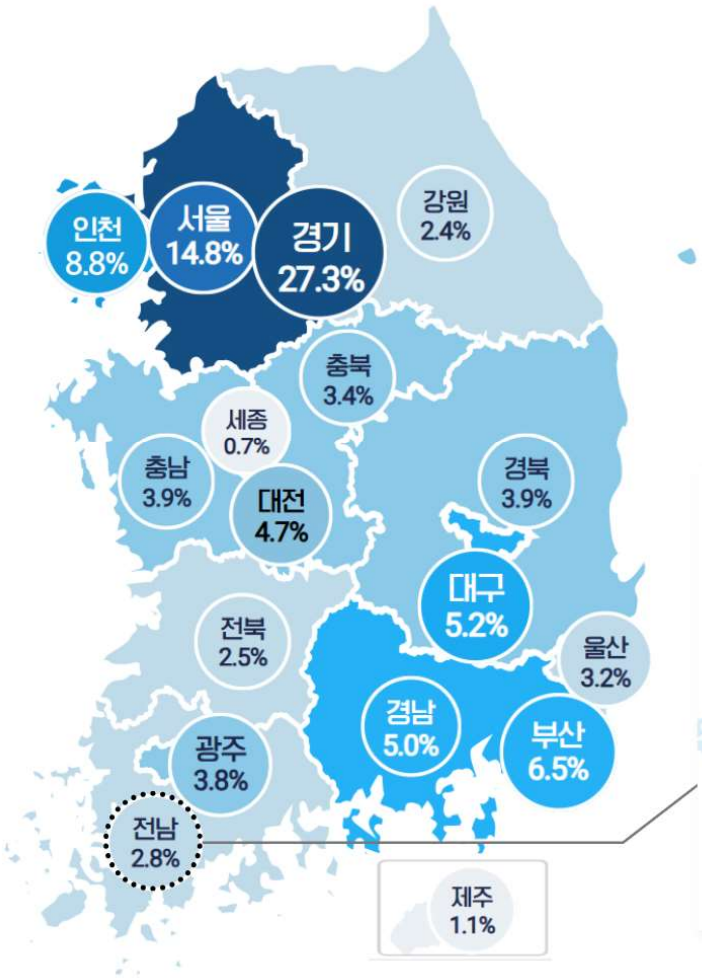
지역별 현황

· **경기 27.3%**(234,311건), **서울 14.8%**(127,191건), **인천 8.8%**(75,836건), 부산 6.5%(55,771건), 대구 5.2%(45,057건) 등의 순

· **전라남도**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(1.2%↑)

* 장애인 전용구역 및 친환경차 전용구역, 횡단보도, 교차로, 인도, 소화전 앞 등 불법 주정차 신고 민원 증가

1월 지역별 민원발생 비율



전라남도 주요 민원키워드

전라남도 민원발생 현황

※ 신청지역이 확인된 859,792건 대상으로, 민원의 처리기관 기준이 아닌, 신청지역 기준임

01 민원 동향(1월)

분야별 현황

· 분야별로는 **교통 분야*(67.0%)**가 가장 많고, 행정·안전(6.3%), 도로(5.0%), 환경(2.8%), 주택·건축(2.6%), 산업·통상(2.2%) 분야 등의 순

*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교통 분야의 과반수 차지

교통	행정·안전	도로	환경	주택·건축	산업·통상	경찰·검찰·법원	보건
67.0%	6.3%	5.0%	2.8%	2.6%	2.2%	2.1%	1.7%

교육	관광	문화	방송통신	노동	수자원	농림·축산	재정
1.1%	1.0%	1.0%	0.9%	0.9%	0.7%	0.7%	0.6%

국방	과학기술	도시	복지	세무	체육	해양수산	외무통일	우정
0.6%	0.5%	0.5%	0.4%	0.4%	0.3%	0.3%	0.3%	0.2%

※ 기타 분류가 제외된 938,353건 대상

증감률 상위 분야

증가순 불법 숙박 영업 행위 신고 민원 등 **관광** 분야 증가

관광
70.5% ↑

세무
40.1% ↑

도시
9.0% ↑

농림·축산
7.7% ↑

복지
4.8% ↑

감소순

경찰·검찰·법원
49.3 ↓

교육
34.8% ↓

체육
31.1% ↓

재정
27.8% ↓

우정
24.8% ↓

01 민원 동향(1월)

주요 민원키워드

· 1월 상위 민원키워드는 불법 광고물(현수막 등) 단속 요구,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, 재개발 추진 요구 등과 관련된 민원키워드가 상당수 차지

〈일반〉

순위	키워드
1	불법광고물
2	쓰레기 무단투기
3	재개발 추진
4	변전소 신설 반대
5	**아파트 연결통로**
6	의료법 위반
7	가로등 정비
8	**계엄령**
9	열병합발전소
10	**제주항공 여객기 사고**

〈도로교통〉

순위	키워드
1	불법주정차
2	친환경차 충전구역
3	어린이 보호구역
4	도로시설물 정비
5	교통법규 위반차량
6	**버스노선 개선**
7	**도로 제설**
8	위례신사선 착공 지연
9	포트홀 정비
10	경의중앙선 향동역 조기 착공

[주요 키워드 관련 민원 사례]

일반	⑤ 아파트 단지 통합을 위한 송도 ◇◇ 5개 단지 지하 보행자 통로설치 요구 ⑧ 12.3 비상계엄령 관련 찬·반, 수사 및 헌법재판소 재판 관련 민원 등 ⑩ 12.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요구 등
도로 교통	⑤ 울산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불만 및 기존 노선 원상복구 요구 ⑦ 대설주의보에 따른 선제적 제설 요구 및 폭설 피해 신고 및 빙판길 제설 작업 요구

02 기관별 동향(1월)

중앙행정기관

· 1월 중앙행정기관 민원은 **총 113,840건**으로 **전월 대비 16.6% 감소**

·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국세청, 기재부 등, 감소한 기관은 대검찰청 등

[발생량 상위 15개 기관]

기관명	'24.12월	'25.1월	증감률
경찰청	45,571	33,133	-27.3%
국토부	18,836	14,884	-21.0%
고용부	8,728	8,806	0.9%
국민권익위	5,719	6,733	17.7%
대검찰청	10,466	5,432	-48.1%
국방부	5,691	5,217	-8.3%
식약처	4,753	4,185	-12.0%
복지부	2,697	3,278	21.5%
환경부	3,038	2,738	-9.9%
국세청	1,992	2,684	**34.7%**
행안부	3,067	2,586	-15.7%
과기정통부	2,534	2,329	-8.1%
법무부	2,444	2,036	-16.7%
기재부	544	1,898	**248.9%**
공정거래위	2,106	1,703	-19.1%

[증가율 상위 15개 기관]

기관명	'24.12월	'25.1월	증감률
기재부	544	1,898	**248.9%**
인권위	407	1,029	**152.8%**
국세청	1,992	2,684	**34.7%**
공수처	850	1,061	24.8%
국정원	549	683	24.4%
인사처	763	935	22.5%
복지부	2,697	3,278	21.5%
질병청	118	142	20.3%
국민권익위	5,719	6,733	17.7%
해경청	173	203	17.3%
보훈부	363	421	16.0%
중기부	217	246	13.4%
금융위	314	349	11.2%
외교부	427	448	4.9%
문체부	486	504	3.7%

※ 1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

[주요 민원 증가 사례]

국세청	2024년 연말정산 관련 문의 등(2,684건)
기재부	위례신사선 예비타당성조사 생략 요구 민원 등(1,898건)
인권위	이른바 '천대엽 판결' 관련 민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요구 등(1,029건)

02 기관별 동향[1](1월)

지방자치단체(광역)

- 1월 광역자치단체 민원은 **총 64,170건**으로 **전월 대비 2.6% 감소**
- 전월 대비 민원이 증가한 시·도는 인천, 경북, 전남 등 4개 기관, 감소한 시·도는 대전, 경기, 경남 등 13개 기관

[광역자치단체 민원 발생량 및 증감률]

기관명	'24.12월	'25.1월	증감률
서울	34,243	30,486	-11.0%
인천	10,436	14,799	**41.8%**
세종	4,660	4,726	1.4%
대전	5,583	4,148	-25.7%
경기	2,465	1,969	-20.1%
부산	1,717	1,579	-8.0%
광주	1,599	1,525	-4.6%
울산	1,276	1,142	-10.5%
대구	1,046	954	-8.8%

기관명	'24.12월	'25.1월	증감률
충남	503	500	-0.6%
제주	465	451	-3.0%
경북	301	372	**23.6%**
전남	282	353	**25.2%**
강원	327	325	-0.6%
경남	373	298	-20.1%
충북	292	273	-6.5%
전북	339	270	-20.4%

※ 1월 민원발생량 순

[주요 민원 증가 사례]

인천	송도 □□아파트 5개 단지통합을 위한 지하통로 설치 요구 민원 등(14,799건)
경북	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 등(372건)
전남	△△아파트 입주자대표 비리 조사 요구 민원 등(353건)

1) '25.2.3. 10시 기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로, 이후 기관 간 민원 이송 등으로 실제 처리한 민원 통계와 다를 수 있음

02 기관별 동향(1월)

지방자치단체(기초)

· 1월 기초자치단체 민원은 **총 760,541건**으로 **전월 대비 6.1% 감소**

· 발생량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증가한 기관은 경기 고양시, 대전 서구 등, 증가율 상위 15개 기관 중 전월 대비 증가한 기관은 강원 평창군 등

[발생량 상위 15개 기관]

기관명	'24.12월	'25.1월	증감률
경기 수원시	23,293	20,426	-12.3%
충북 청주시	18,770	18,431	-1.8%
경기 성남시	20,369	16,909	-17.0%
경기 고양시	14,400	14,611	1.5%
경남 창원시	15,113	14,236	-5.8%
경기 화성시	15,276	13,358	-12.6%
충남 천안시	14,906	12,957	-13.1%
경기 용인시	14,718	12,693	-13.8%
인천 서구	14,537	12,399	-14.7%
경기 안산시	14,406	12,170	-15.5%
대전 서구	11,802	11,984	1.5%
서울 송파구	12,455	10,838	-13.0%
서울 서초구	11,474	9,990	-12.9%
경기 시흥시	11,209	9,905	-11.6%
경기 평택시	10,283	9,813	-4.6%

[증가율 상위 15개 기관]

기관명	'24.12월	'25.1월	증감률
강원 평창군	341	821	**140.8%**
강원 정선군	376	719	**91.2%**
경남 합천군	155	293	89.0%
전북 임실군	106	196	84.9%
강원 화천군	134	244	82.1%
경북 안동시	1,851	2,895	**56.4%**
경남 창녕군	264	405	53.4%
경남 거창군	372	520	39.8%
전남 보성군	171	238	39.2%
충북 단양군	144	189	31.3%
전북 김제시	489	634	29.7%
강원 홍천군	531	668	25.8%
충남 당진시	1,822	2,223	22.0%
전남 영광군	447	542	21.3%
강원 양양군	331	398	20.2%

※ 1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

[주요 민원 증가 사례]

강원 평창군	친환경차 및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차 신고 등(821건)
강원 정선군	횡단보도 및 소화전 앞 불법주차 신고 등(719건)
경북 안동시	교차로 모퉁이 및 버스정류장 불법 주정차 신고 등(2,895건)

02 기관별 동향(1월)

교육청

· 1월 교육청 민원은 **총 9,437건**으로 **전월 대비 31.0% 감소**

· 전월 대비 증가한 교육청은 울산, 광주 등 3개 기관,
감소한 교육청은 충북, 서울, 부산 등 14개 기관

[교육청 민원 발생량 및 증감률]

기관명	'24.12월	'25.1월	증감률	기관명	'24.12월	'25.1월	증감률
경기	4,553	3,880	-14.8%	대구	191	159	-16.8%
서울	4,704	2,023	-57.0%	충북	777	148	-81.0%
울산	94	604	**542.6%**	전북	220	147	-33.2%
인천	521	409	-21.5%	강원	168	143	-14.9%
경북	427	388	-9.1%	**전남**	129	132	**2.3%**
광주	178	379	**112.9%**	대전	226	130	-42.5%
부산	563	313	-44.4%	세종	93	79	-15.1%
경남	456	253	-44.5%	제주	90	58	-35.6%
충남	277	192	-30.7%				

※ 1월 민원발생량 순

[주요 민원 증가 사례]

울산교육청	●●고 축제에 부적절한 코너(나락퀴즈쇼) 운영 불만 등(604건)
광주교육청	관내 2개 고교 축제에 부적절한 코너 운영 불만 등(379건)
전남교육청	여수★★유치원 갑질 신고 등(132건)

02 기관별 동향(1월)

공공기관 등

· 11월 공공기관 등의 민원은 **총 29,542건**으로 **전월 대비 36.8% 감소**

· 방송통신심의위원회,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의 민원이 전월 대비 증가, 감소한 기관은 법원행정처 등

[발생량 상위 15개 기관]

기관명	'24.12월	'25.1월	증감률
금융감독원	2,977	2,444	-17.9%
법원행정처	12,968	2,330	-82.0%
인천도시공사	1,878	1,643	-12.5%
한국소비자원	1,781	1,615	-9.3%
한국전력공사	1,549	1,512	-2.4%
한국토지주택공사	2,578	1,255	-51.3%
국가철도공단	1,298	1,029	-20.7%
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	1,126	861	-23.5%
방송통신심의위원회	500	853	**70.6%**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	870	802	-7.8%
대한법률구조공단	770	793	3.0%
한국산업인력공단	2,779	789	-71.6%
한국도로공사	769	718	-6.6%
한국철도공사	986	693	-29.7%
한국제품안전관리원	827	644	-22.1%

[증가율 상위 15개 기관]

기관명	'24.12월	'25.1월	증감률
한국산업기술시험원	6	313	**5,116.7%**
방송통신심의위원회	500	853	**70.6%**
게임물관리위원회	214	354	**65.4%**
한국콘텐츠진흥원	122	173	41.8%
한국개발연구원	114	154	35.1%
헌법재판소	399	532	33.3%
중앙선거관리위원회	219	275	25.6%
근로복지공단	320	397	24.1%
강남구도시관리공단	133	156	17.3%
인천시설공단	107	118	10.3%
한국환경공단	141	155	9.9%
한국공정거래조정원	182	200	9.9%
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	198	217	9.6%
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	264	288	9.1%
한국도로공사서비스(주)	238	250	5.0%

※ 1월 민원 100건 이상 기관 대상

[주요 민원 증가 사례]

한국산업기술시험원	KC 인증 관련 문의 등(313건)
방송통신심의위원회	드라마 '원경' 딥페이크 장면에 대한 심의 요청 등(853건)
게임물관리위원회	넥슨 '마비노기 영웅전' 성 상품화 및 부적절 광고 신고 등(172건)

03 민원예보(2월) : 중고거래

중고거래 시장 증가에 따른 중고거래 사기 피해, 금지 품목 판매, 물품 하자 등 민원의 지속적인 증가, 중고거래 관련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민원 분석 및 예보 실시

1 민원 현황

○ **(민원추이)** 최근 3년간('22.2월~'25.1월)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'중고거래' 관련 민원은 **총 10,744건**(월평균 298건)

- '중고거래' 관련 민원은 최근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, '24년 10월이 422건으로 가장 많음

  * 최근 3년간('22년~'24년) '중고거래' 관련 민원은 '24년 월 평균 326건으로, '23년(월 평균 261건) 대비 1.25배 증가

〈 최근 3년간('22.2월~'25.1월) 월별 민원 추이 〉

○ **(신청인)** **남성**(76.5%)이 여성(23.5%)보다 많고, 연령별로 **20대 이하**(34.7%), 30대 이하(34.3%), 40대(20.9%), 50대 이하(7.5%) 등의 순

  * 성별 정보 확인 가능 8,336건(전체의 77.6%), 연령 정보 확인 가능 7,819건(전체의 72.8%) 대상

○ **(신청지역)** **경기**(30.6%), 서울(22.2%), 인천(6.8%), 부산(6.5%) 등의 순

  * 신청지역 정보 확인 가능 10,684건(전체의 99.48%),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

○ **(처리기관)** **경찰청**(50.8%), 과기부(5.5%), 공정위(4.7%) 등의 순

2 개선 방향

현재	개선 방향
▲ **(중고거래 사기 피해)** 중고 거래 시장의 확대와 소비 패턴의 변화 등 중고 플랫폼의 급성장으로 중고거래 증가에 따른 피해 민원 증가 - 온라인 플랫폼의 활성화로 비대면 거래의 신뢰를 악용한 허위 물품 판매 등으로 피해 발생 - 중고거래 건수 및 금액의 확대로 범죄의 조직화 대형화로 피해 규모 증가 ▲ **(중고거래 금지 품목 판매)** 개인간 거래 활성화로 범죄 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금지품목 거래 - 의약품, 안경·선그라스(도수), 화장품 샘플, 생명체(반려동물, 곤충, 물고기 등), 식품(개봉, 개인제조) 등 판매 - 해외 직구의 활성화로 직구 1년 미만 제품, KC 미인증 제품 등 중고판매 금지 제품 판매 증가 ▲ **(중고 개인간 거래 분쟁 해결 요구)** - 중고거래 이후 제품의 하자, 파손, 고장, 가품 등으로 인한 환불 요구 등 '개인과 개인간 거래' 분쟁 해결 요구 민원 증가	▲ **(중고거래 사기 피해 방지 제도 강화)**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피해 발생 시 제도적 책임 강화 필요 - 강화된 사용자 인증 필요 -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 방안·절차 마련 의무화 - 캠페인 등 사용자 교육(안전거래 가이드 등)과 인식 개선 필요 ▲ **(중고거래 금지 품목 단속 강화)** 중고거래 금지 품목에 대한 단속 강화 및 홍보 필요 - 중고거래 금지 품목에 대한 상시·집중(명절전·후 등) 모니터링을 통한 단속 강화 * 플랫폼 자체 검열 강화 및 해당 게시물에 대한 즉각적 삭제 · 이용 제한 필요 - 거래 금지 품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사용자 인식 개선 ▲ **(중고거래 분쟁 해결 내실화)** 관계기관과 플랫폼사의 자율분쟁 조정을 위한 정기적 협약·협력 등 필요 - 분쟁 해결 표준을 제시하여 자체 분쟁 해결 노력 * 분쟁 사례 위주의 가이드라인 제시 - 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한 플랫폼사의 분쟁조정 강제성 확보

3 주요 민원 유형 및 사례

[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고]

-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. 일방적인 차단으로 연락을 못 하게 하였고 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. 16일에 택배를 보낸다고 하였으나 18일이 되어서도 보내지 않았습니다.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꼭 잡아서 재발을 막아주세요.('23.5.)
- □□에서 중고거래사기를 당했는데 그 □□자체가 사기인것 같습니다. 사기임을 알고 카페를 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. 그리고 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도 해봤지만 없는 번호라고 뜹니다. 더 많은 사기 피해가 생기기 전에 카페에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.('24.4.)
-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찾아보니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피해자만 6,000명이 넘고 피해액도 65억이 넘습니다. 이름, 계좌번호, 거래 사이트, 거래 위치, 판매 물품 등을 여러 개를 이용하고 있는데 꼭 확인 후 처벌 부탁드립니다.('24.11.)
-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많고 명의도용으로 사기치고 다니고 있습니다. 계좌도 무한정으로 만들 수 있는 적금 자율계좌로 이용하고 있어요. 콘서트 티켓, 한국시리즈 야구 티켓, 모바일 상품권, 전자기기 다 사기 치고 있습니다. 피해자가 더 이상 늘지 않고 하루빨리 사기 범죄를 멈춰지도록 조치해주세요.('24.10.)

[중고거래 금지 품목 판매 신고]

- 포획 금지 종인 자라를 ◎◎에서 버젓이 판매하려 올려놓은 사람을 제보합니다. 잡으면 안 되는 야생동물을 잡은 것도 모자라 대놓고 판매까지 하려 하다니 부디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.('22.7.)
- 해외 직구 메인보드를 국내 중고거래사이트 판매 중인데 전파법 해당 의심이 됩니다. 국내 중고거래 사이트 ◎◎에서 판매 중이며, 판매 중인 제품이 미개봉(미사용 제품)으로 판매 중입니다.('24.6.)
- 의료기기인 △△은 요실금 치료기입니다. 따라서 인증을 득한 의료기기 판매업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중고플랫폼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. 중고거래업자(되팔이)가 많이 있습니다. 이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이며 명백한 불법입니다. 판매되지 않도록 막아 주십시오.('24.5.)

03 민원예보(2월) : 중고거래

■ 피부염 상처 소독용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연고를 중고거래 플랫폼 ◎◎에서 아무 허가 없이 판매 중입니다. 적절한 행정 조치 부탁드립니다.('23.10.)

[중고거래 하자·파손 등에 의한 환불 요구]

■ ◎◎거래로 중고거래 소액제품 구매 후 제품 확인을 하는데 게시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. 판매자는 하자 확인 거부 및 환불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?('23.7.)

■ ◎◎에서 중고거래를 했는데 판매자가 고장난 제품 보내고 환불을 안해주며 연락도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('23.12.)

■ ♤♤에서 중고거래 후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숨긴, 기능상 치명적 하자를 10분만에 발견하여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여 민원 신청합니다. 부디 공정하게 처리해 주십시오.('22.11.)

■ ◎◎에서 이동식 에어컨을 20만원에 거래하였습니다. 리모컨 기능부 미작동 부품 미인수 등으로 환불 요청하였으나 일방적으로 환불 안해준다는 말과 함께 수신 차단했습니다. 판매할 때는 새거라고 해놓고 고장난 물건 판매 후 환불을 거부합니다.('23.7.)

[중고거래 관련 문의]

■ 담배사업법상 허가받지 않은 자의 담배 판매는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.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의 개인 간 중고거래 또는 양도도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. 즉, 액상(카트리지), 담배를 제외한 중고기기를 개인 간 양도, 매매 하는 것이 불법인가요? 불필요한 기기를 처분하기 전 확인하고자 합니다.('23.4.)

■ 중고의료기기 거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. 1. 의료기관에서 중고 의료기기를 다른 의료기관에 직접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2. A 의료기관에서 중고의료기기 판매를 위해 중고필증을 받고 해당 의료기기를 B 의료기관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.('24.9.)

■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중고거래시 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? 또한 국세청에서 중고거래 플랫폼과 프리미엄 리셀을 개인이 아닌 전문판매업자로 판단하는 '계속성'과 '수익'의 기준이 궁금합니다.('24.7.)

알 림 판

민원정보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

국민신문고 민원·제안 및 외부게시판·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(AI)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2020년 2월 3일 개통하였습니다.

민원을 처리하는 기관 담당자는 누구나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 www.pias.go.kr(업무망)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'사용자 계정신청 안내'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✓ **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(070-4108-3625)로 문의 요망**

담당자 안내

목 차	담당자	연락처
01. 민원 동향(1월)	윤영성 주무관	044-200-7330
02. 기관별 동향(1월)		
03. 민원예보(2월)		
시스템 이용 문의	HelpDesk	070-4108-3625